

【일련번호: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처분 · 시정요구

제 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관리 업무 부적정
소 관 부 서 ■■■
조 치 부 서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현금영수증 사용 관리업무 부적정 내역]

년도	지출 번호	지출일자	적요	금액 (단위: 원)	채주	비고
계			4건	1,219,000		
2018	42	2018.03.09	2018년 1~2월 시간외근무자 특근매식비 지급	99,000	△ △	신용카드
2018	74	2018.07.1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지급	384,000	▲ ▲	신용카드
2018	109	2018.07.10	2018년 3~5월 시간외근무자 특근매식비 지급	56,000	▽ ▽	신용카드
				232,000	▲ ▲	
2019	행정과 지출	2019.04.04. (공문결제일)	2019년 국회의원 보궐선 거 경비 지출 요청(특근 매식비)	448,000	▲ ▲	현금 영수증

※ ■■■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고성군 재무회계규칙」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 3.30. 시행)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 3.30.시행)에는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사용 후 매출표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재무관까지 보고(결재)하고, 재무관은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금량비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카드사용 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에도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에서는 신용카드 담당자 변경 시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 및 서면 기재사항을 누락하였으며, 2018년 1~2월 시간외근무자 특근매식비 지급 등 3건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2019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비 지출 요청(특근매식비) 건은 현금영수증 카드사용 대장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는 등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 사항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A(현 ▼▼)에게 신분상 조치 ‘주의’ 처분함.

조치할 사항 ■■■장은

신용카드 담당자 변경 시 상호확인 후 누락된 서면 기명날인 사항과 현금영수증 카드사용 대장 작성을 누락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비치하여 주시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처분 · 주의요구

제 목 불필요한 서류 징구
소 관 부 서 ■■■
조 치 부 서 ■■■
내 용

1. 현황(불필요 서류 징구 내역)

적 요	지급금액 (천원)	지급일	지급명령 지출번호	계약상대자	비고
계	46,979			5곳	
☆☆ 안길 정비공사 관 급자재(레미콘)	3,810	2019.05.02	45	▽▽	국세,지방세납 세증명 징구
★★ 진입도로 정비 공 사 관급자재(아스콘)	13,500	2019.04.12	20	△△	국세,지방세납 세증명 징구
☆☆ 컴퓨터조성사업을 위 한 난간 구입 및 설치	9,870	2019.06.14	84	UU	국세,지방세납 세증명 징구
■■■ 청사 유지보수공 사	3,149	2018.12.24	161	∩∩	국세,지방세납 세증명 징구
■■■사무소 청사 개보 수공사	16,650	2018.12.28	164	ㄷㄷ	국세,지방세납 세증명 징구

※ ■■■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제18조 및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후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6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6장 제3절의 규정의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경우 채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의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을 채납한 채납자에 대해서는 채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31177(2016.10.11.), ◆◆-1108(2017.1.11.), ◆◆-819(2018.1.9.)호와 관련하여 세외수입 채납자에 대한 공사대금 및 보상금 등 지급시 부서별 지출담당자는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세외수입 등의 채납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3차례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8조에 따라 이용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공동이용함에 있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에서는 1. 현황과 같이 ☆☆ 안길 정비공사 등 5개의 공사와 관련된 대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받은 경우로써 지출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함에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중복으로 제출 받는 등 계약상대자로부터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한 사실이 있다.

처분 사항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한 B에게 신분상 조치 ‘주의’ 처분함.

조치할 사항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처분 · 시정요구

제 목 ■■■ 행정정보 마을방송 구축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 ∫ 외 9개 마을의 노후화된 행정정보 마을방송망을 정비할 목적으로 2019. 4.10. ∫ ∫ 대표 C과 16,650천원에 「■■■ 행정정보 마을방송 구축사업」를 계약 체결하고, 2019. 4.12. 착공하여 2019. 5. 9. 준공하였음.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공사비(천원)			공사기간	도급자
			계	도급액	관급액		
■■■ 행정정보 마을방송 구축사업	■■■일 원	○행정정보 마을방송 구축: 10개소	45,597	16,650	28,947	2019. 4.12. ~ 2019. 5. 9.	∫ ∫ 대표 C

2. 관계법령(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와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기준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3관에 따르면 간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직접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며, 계산방식은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에서 2019. 4.10. ∫ ∫ 대표 C와 16,650천원에 계약을 체결한 「■■■ 행정 정보 마을방송 구축사업」의 경우,

계약 체결 후 내역서에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비를 227,165원 반영하였고,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율(7.9%)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304,874원으로 계산되어야 함에도 재료비×간접노무비율(7.9%)로 잘못 산출하여 665,180원으로 반영하였다.

따라서 ■■■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준공 요청 시 미사용 안전관리비 및 잘못 계산된 간접노무비에 대하여 확인 및 정산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대금 16,650천원을 지급하여 755천원 감액하지 않은 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 사항

위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법령 등을 위배하여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D에게 신분상 조치 ‘주의’ 처분함.

조치할 사항 ■■■장은

정산 없이 지급한 미사용 안전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755천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시정요구

제 목 환경관리비 등 정산 업무 소홀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공사비(천원)			공사기간	도급자
			계	도급액	관급액		
용배수로 정비공사	■■■ ○○○	○수로관설치(Φ400~1000) : L=424.0m	35,857	19,266	16,591	2019. 4.12. ~ 2019. 5. 9.	◁▷ 대표 F
○○○ 준설공사	■■■ ○○○	○소류지 준설: 1,610m³ ○권양기 설치 1개소	26,040	18,480	7,560	2017.12. 1. ~ 2017.12.27.	♠♠ 대표 G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제6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비용부담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비용금액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4조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따라 발주자 및 공사감독은 환경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공사기성 또는 준공검사시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는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에서 2019. 4.10. ◁◁ 대표 F와 19,266천원에 계약을 체결한 「::: 용배수로 정비사업」(이하 “①”이라고 한다) 및 2017. 12. 1. ♡♡ 대표 G와 18,480천원에 계약을 체결한 「∞∞ 준설공사」(이하 “②”이라고 한다)의 경우,

계약 체결 후 내역서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①의 경우 96,782원 ②의 경우 99,613원을 계상하였다.

따라서 ■■■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가 의무경비로 포함된 환경관리비 집행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세심한 주의 없이 ①에서는 124천원, ②에서는 124천원의 예산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은

정산 없이 지급한 ①의 공사비 124천원, ②의 공사비 124천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처분 · 시정요구

제 목 ■■ 청사보수 및 환경개선사업 설계 부적정
소 관 기 관 ■■
조 치 기 관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에서는 청사보수 및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2019. 5.15. ▷▷ 대표 H와 19,710천원에 「■■ 청사보수 및 환경개선사업」를 계약 체결하고 2019. 5.16. 착공하여 2019. 6.12. 준공하였음.

공 사 명	위 치	사업량	공사비(천원)			공사기간	도급자
			계	도급액	관급액		
■■ 청사보수 및 환경개선사 업	■■사 무소	○방화문교체: 3개소 ○아스팔트포장: 6.3a ○차량비가림막: 3개소 ○도막형 도장: 82㎡	27,714	19,710	8,004	2019. 5.16. ~ 2019. 6.12.	▷▷ 대표 H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 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설계서는 설계도서대로 시공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과 예산 절감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사업관리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4조(설계서 등의 검토), 제138조(시공확인)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하며, 제162조(준공검사 등의 절차)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

사 서류를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정산대상 경비가 관련 규정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확인 한 후 당해 공사의 시공내용이 설계도서 및 계약사항과 상이하거나 내용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에서 2019. 5.15. ▷▷ 대표 H와 19,710천원에 계약을 체결한 「■■■ 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사업」 경우,

설계 내역서를 작성하면서 아스팔트포장 공종에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위한 교통통제원 2인을 내역에 반영하였으나, 교통통제원은 도로 포장공사 구간내 이동차량과 보행자 통제를 위하여 시·중점에 각각 배치하는 근로자로 청사내 포장 공종에는 불필요함에도 현장 여건에 대한 세심한 주의 없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는 등 부적정하게 설계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에서는 해당 공사의 시공내용이 설계도서 및 계약사항과 상이하거나 내용이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대금 19,710천원을 지급하여 417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 사항

현장 여건에 대한 세심한 주의 없이 부적정하게 설계 내역서를 작성한 J에게 신분상 조치 ‘주의’ 처분함.

조치할 사항 ■■■장은

설계변경 및 정산 없이 지급한 공사비 417천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일련번호: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처분 · 시정요구

제 목 장애인 자격상실 대상자 장애인등록증 반환 업무 소홀
소 관 부 서 ■■■
조 치 부 서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성명	말소/정지 일자	반환통보서 송달	반환 여부
K	—	미송달	미반환
L	—	미송달	미반환
M	—	미송달	미반환

2. 관계법령(판단기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거주불명자 제외),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하며,

장애등록 취소 또는 장애등급 변경 등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간을 2주 후로 지정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장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반환기일까지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7년 7월 ■■■ 종합감사 실시 후 ▶▶-218(2018. 1. 5.)호로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처분요구서 12 장애인 자격상실 대상자 장애인 등록증 반환 안내 소홀로 행정상 시정 조치를 한 사실이 있으며, ■■■-1863(2018. 3. 5.)호로 종합감사 처리결과 제출 시 해당 항목에 대하여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2017년 7월 ■■■ 종합감사 결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행정상 시정 조치하였으나, 2017. 7.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장애인등록증 반환 대상자 3명에 대해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송달하지 않는 등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폐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 사항

장애인 자격상실 대상자 장애인등록증 반환 업무를 소홀히 한 N에게 신분상 조치 ‘주의’ 처분함.

조치할 사항 ■■■장은

반환통보서를 송달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송달하여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하고,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처분 · 주의요구

제 목 고성군 읍면장 관내 순찰 규정 이행 소홀
소 관 부 서 ■■■
조 치 부 서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장 근무 사항

직 위(직급)	성 명	관 리기 간	현 근무처	비 고
■■■장 (-5급)	O	2015. 1. 1.~2017.12.31.	정년 퇴직	
■■■장 (-5급)	P	2018. 1. 1.~2018.12.31	☞☞	
■■■장 (-5급)	Q	2019. 1. 1.~현재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고성군 읍면장 관내 순찰 규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읍면장의 관할구역 순찰을 의무화하여 주요시책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관내 동향을 파악하여 군민의 불편, 불만 요소를 사전 해소하는 한편, 취약요소를 점검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함으로써 군민의 신뢰와 자치행정의 능률 향상을 꾀함에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순찰자), 제3조(순찰회수), 제4조(순찰시간), 제5조(순찰장소)에 따라 읍면장을 주 3회이상 근무시간내에 관할구역 일원 주요사업추진현장, 각종사고 발생우려지역, 화재 발생우려지역, 무허가 행위우려지역, 민원 발생우려지역, 기타 취약지역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순찰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6조(순찰결과조치) 및 제7조(사후관리 등)에 따라 자체조치 가능 사항은 즉시 조치후 기록 보존하고 자체조치 불가사항은 관련부서 보고 및 건의 하고, 중요사항은 지휘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별지 순찰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8조(상벌)에 따라 동향파악, 취약요소의 발견 및 조치로 군정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도가 높을 경우 별도 시상하고, 순찰 불이행, 주요사안 조기 미발견, 행정조치 지연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에서는 2017. 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면장 순찰일지 미작성 및 기록 유지 자료가 없어 면장의 순찰 실시여부는 알 수 없게 한 사실이 있음.

그러나 2019년 관내 동향보고 자료 확인 결과 14건의 동향보고 건은 있음.

처분 사항

고성군 읍면장 관내 순찰 규정 이행을 소홀히 한 행위 시 ■■■장 R(현 ☞☞) 과 S에게 ‘주의’ 처분함.

조치할 사항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처분 · 주의요구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소 관 부 서 ■■■
조 치 부 서 ■■■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소재지	지번	면적 (㎡)	접수 일자	발급 일자	농지취득자	
					성명	주소
■■■ ♣♣	-	579	'19.4.5.	'19.4.5. (-)	T	■■■ **

2. 관계법령(판단기준)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에 따라 민원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면장에게 신청한 경우 농지법 제규정 적합여부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3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여부, 제4조 자격증명 발급대상자 여부, 제6조 자격증명 신청자 적합여부, 제7조 제4항 공부 확인, 제8조 자격증명 발급요건 검토, 제9조 자격증명의 발급 및 미발급 사유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에서는 2019.4.5. 접수번호-147호로 ■■■ ** T이 신청한 ■■■ ♣♣ -번지 답 579㎡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함에 있어 현장 출장 확인 결과 도로명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 ○○ 주택용도의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 건축면적 54㎡이 해당 부지에 건축되어 있었으면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약) 및 제35조(농지전용신고)에 따른 농지전용 인허가 여부 확인 및 일반건축물 대장 등재 여부를 확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및 미발급하여야 함에도 이 건축물이 1992.12.30.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임을 일반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였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 제2항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9.4.5. 발급번호 -호로 농업경영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 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S에게 신분상 조치 ‘**훈계**’ 처분함.

조치할 사항 ■■■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